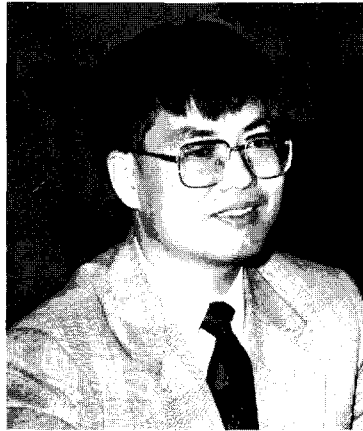


젊은 인력 부족한 우리 농촌 엘리트 농민 적정수 확보 시급

현 재 우리나라의 농업인력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그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농민신문사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농사일이 매우 힘든 편인데 그 이유중의 하나는 농업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농촌의 일손부족으로 품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지난 1987년만 하여도 품값 상승률이 4%에 불과하였으나 1989년 24%, 1990년 22%, 1991년 32%로 그 상승률이 매우 높아졌다. 그에따라 품값이 2만원을 넘어섰으며 어떤 경우에는 돈을 많이 주고서도 일손을 못 구할 정도이다.

농업분야에서 농약을 사용하고 기계를 더 많이 이용함에 따라 생산성이 향상되어 과거에 많은 인력이 하던 일을 적은 인력으로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계속적인 농업 재배 방법의 발달에 의하여 더 적은 인력으로도 우리나라의 농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면에서 과연 현재의 농업인력이 부족한가 아닌가에 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러나 문제는 젊은 인력이 농업분야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난 1985년에서 1989년까지 매년 45만명 가까이 이농을 하였는데 그 상당수가 40세 이하의 젊은 계층이다. 또 젊은 인력이 신규로 공급되는 경우



이 영 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력개발실 책임연구원

**농고는 줄고
농대는 급증, 졸업후
영농종사자 극소수
전문농업인 양성
위한 제도개편과
지원따라야**

도 매우 적은데 그 이유로는 이들 젊은이들이 농업이 힘들고 수지가 불안하며 장래성이 불안정하다고 느끼고 농업을 원치않는 것이다. 그에따라 농가에는 가업을 계승할 후계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농업외의 다른 대안이 없는 노령층 인구들만이 어쩔수 없이 농업을 계

속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 의하여는 급격한 개방화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집약적인 농업경영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화시대의 우리나라 농업을 이끌고 나갈 엘리트 농민을 적정수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충분한 교육훈련을 시켜야하는데 그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농업계 각급학교가 가장 주된 통로(일종의 주 파이프라인)가 되어야 할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농업계 각급학교에서의 인력양성은 많은 문제점이 있어 그 개편이 요구되는 상황에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 각급 학교 교육의 현황과 개편방향을 알아보자.

1. 농업계 고교 교육

먼저 농업계 고교 교육의 현황과 문제를 살펴보자.

첫째 순수농고의 비순수농고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농업계 고등학교는 순수농고와 종합고교 혹은 실업고교로 구성되어 있는 비순수농고로 구분할 수 있다. 순수농고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1981년의 56개에서 1992년에는 37개교로 감소하였다. 반면 비순수농고는 1989년의 37개교에서 1992년 59개교로 증가하였다. 순수농고가 비순수농고로

변화하면 여러 면에서 교육여건이 나빠진다. 심지어 어떤 농고의 교장선생님은 농고가 비순수농고가 되면 영농인 양성 기능은 포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학교에서 어떤 학생은 전산실에서 쾌적한 분위기에서 실습을 하는데 농과계 학생은 돼지 똥을 치우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대비가 된다.

둘째 현재의 농고 학생은 영농인 양성이라는 농업계 고교의 교육목적에는 부적당한 학생들이 많다. 중학교의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타학교에 진학이 곤란하여 농고에 입학하는 경향이 많다. 즉 영농목적으로 농고에 입학한 학생의 비율은 낮으며 그에따라 학생들의 중도탈락율이 타계열에 비하여 높다. 또 농고졸업생중 영농능력이 미흡하여 영농을 실제로 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영농인 양성기능 약화되고
실습시설 부족도 의욕낮춰**

셋째 농고의 실험실습 시설이 현대화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웬만한 양계장에 설치되어 있는 사료공급, 분뇨건조, 달걀수거, 크기분류등 자동시스템이 농고에는 거의 없으며, 농고보유 농기계는 구식이고 비닐하우스 재배도 노동력을 이용한 전근대적 방식이다. 농업장비, 시설 및 기계등 장비가 부족하여 단순노동을 필요로 하는 전근대적 현장실습을 할 수 밖에 없어 교사 및 학생의 실습에 대한 의욕이 저하되고 있다. 또 학교시설이 교육목적 보다는 학교의 재정



수입증대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어 학생 및 교사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넷째 농업교사의 영농 지도 능력을 살펴보면 농고교원에 대하여 졸업생들은 “영농의 실제상황을 파악한 후에 지도하여 달라”는 요구가 55%가 될 정도로 이 분야에서 교원의 상황은 나쁜 편인것 같다.

농업계 고교의 개편방향은 다음과 같다. 농업계 고교를 교육목적별로 역할을 재정립한다. 농업계 고교를 실제적인 영농후계자 양성을 위한 농고와 농업관련직 요원양성을 위한 농고로 분리개편한다. 그중에서 전문직업인으로 훈련된 영농후계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 고교는 21세기를 향한 농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기초단계로서 육성한다. 즉 진정한 영농후계자를 양성하는 전문화된 직업훈련기관으로 한다.

실제적인 영농후계자 양성을 위하여 순수 농고중 우수학교

를 자영농고로 전환한다. 일본에도 자영자 양성 농업고등학교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일본의 자영자 양성 농업고등학교를 살펴보면 대규모의 근대적 시설, 설비를 갖춘 농장에서의 실습교육을 통하여 장래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업 기술과 경영능력을 습득하게 한다. 특히 기숙사에서의 공동 생활을 통하여 책임, 협조, 연대를 중요시하는 태도를 육성한다. 1989년의 경우 25개 도 부현에 공립 자영자 양성 농업고등학교가 설치되어 있고 2개 도 부현에 사립학교 형태의 자영자 양성 농업고등학교가 2개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들 자영자 양성 농업고등학교는 특히 졸업생의 취농률이 높아 농업후계자 양성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자영농고에는 우수하면서도 영농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입학하고 중도탈락자가 거의 없으며 졸업생은 졸업후에도 실제

영농 능력이 충분하여 영농을 할 수 있다.

**교육목적별 역할 재정립 필요
자영농고에 집중지원 있어야**

다음으로 자영농고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으로 내실있고 체계적인 농장경영실습과 기술교육(농업생산기술 향상과 경영능력 향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영농고의 영농인 양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첫째, 집중적인 시설지원과 시설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 기계화, 자동화, 성력화된 영농실습시설(예:시설원예, 축산등)이 확충되어야겠다. 둘째, 학생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졸업후 영농 종사를 희망하는 재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겠다. 근본적으로 이들 자영농고화된 농고 재학생들에게 지원을 하여 동기를 유발하여야 하겠다.

교육과정의 개선을 통한 체계적인 농장경영실습과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과정에 대한 개편방안으로는 교육내용의 개편과 교육방법의 개편이 있다. 교육내용의 개편은 기술영농 중심의 교육과 지역농업을 연계하는 것이다. 교육방법의 개선은 현장실습교육의 내실화이고 농촌지도소와의 협조체제 강화이다.

농업계 고교 교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과학영농을 담당할 영농인을 양성하자면 이를 담당하는 교원들의 능력과 의욕이 높아야 한다. 이 분야에서의 지원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교원들의 신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를 포함한 연

수기회(재훈련)를 확대한다.

자영농고 졸업생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자영농고 졸업자중 희망자 전원을 농어민 후계자로 자동적으로 선발하는등 농어민 후계자 제도와 연계시켜야 하겠다. 졸업생의 병역의무를 면제하며 대신 졸업후 3년 이상 영농종사를 의무화한다. 또 기본적인 영농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농지구입, 시설화, 기계화를 지원하는 등 규모화를 지원하여야겠다.

나머지 농고는 농업관련직 요원양성을 위한 농고로 분리 개편한다. 자영농고 육성 대상 순수농고 이외의 나머지 순수농고와 비순수농고는 농업관련직 요원양성을 위한 농고로 개편한다. 이들 학교에 조경과, 농업전산과, 농산물 유통정보과, 도시원예과등의 농업관련직 요원 양성을 위한 학과를 설치한다.

2. 농업계 전문대학

현재의 농업계 전문대학은 많은 문제가 있어 그 개편이 필요하다. 먼저 정부는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농전을 4년제 대학으로 승격시키고 있다. 그 결과 농전의 수가 1981년의 9개에서 1993년에는 4개로 변화하였으며 영농인 양성을 위한 농전의 수는 1993년에 3개에 불과하다.

농업계 전문대학의 경우 지원자는 많으나 영농취업 희망자는 입학생의 3 ~ 10% 정도에 불과하다. 학력의 상승에 따른 고등교육 취학인구의 증가에 힘입어 지원자는 많으나

영농을 희망하는 지원자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농전의 학과 구성상 영농인 양성기능이 취약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취농률이 낮다. '92년 정원 가운데 영농인 양성을 위한 농업생산관련 학과 학생비중이 38%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또 농업계과를 설치한 실업전문대의 영농학과가 유명무실하다. 농업계과 설치 전문대학은 1992년 현재 8개교인데 이들 학교의 입학정원 가운데 영농인 양성과 관련된 학과는 원예(화훼)과와 축산과 뿐이며 학생수로는 4.8%에 불과하다.

농업계 전문대학의 영농인 교육이 미흡하며 농장실무 능력을 키우지 못하는 교과중심의 교육이 되고있다. 그에따라 농업계 전문대학의 취농률이 낮는데 1개 전문대학에서 불과 10명미만이 영농을 하고 있다.

**지원자 많으나 취농률 미미
전문인 양성 내실 기해야**

개편방향으로는 농업계 전문대학을 품목별 전문대학(예:축산전문대학, 과수전문대학등)으로 한다. 즉 주요 품목의 주산지(예:축산주산지, 과수주산지)나 전문 협동조합(축산조합, 과수조합)에 품목별 전문대학을 설치하여 전문인을 양성하며 필요한 경우 신설한다. 이 품목별 전문대학의 교육목표는 전문영농인 양성에 둔다. 즉 농업계 고교 졸업자 보다 높은 수준의 국제화 시대에 요구되는 전문 영농인 즉, 정예인력을 품목별로 양성하게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영농희망자만 입학하도록 한다. 즉 영농희망자들을 특별전형하여야 한다. 특히 농고출신자에게 입학혜택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격 학생이 입학하도록 하여야겠다. 현재의 농업계 전문대학과 다르게 교육과정을 조정한다. 구체적으로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 있어서 달리한다.

개편된 농업계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투자확대**이다. 실험실습시설의 근대화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실습가능토지, 가축, 농기계, 부대시설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들 시설을 갖추도록 농림수산부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시설원예, 축산등 시설현대화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고 실습 목장, 농장시설등에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

둘째, **재학생과 교수에 대한 지원 증대**이다. 재학생중 영농희망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

급하고, 연수지원(해외연수 포함)을 하고, 영농희망자에 대한 특별지원을 하고, 농업계 전문대학생의 긍지를 앙양하여야 한다. 교수진에 대한 연구비지원 증대 및 연수기회(해외연수 포함)도 부여하여야 한다.

셋째, **농업계 전문대학 졸업생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겠다. 농업계 전문대학의 졸업자중 희망자 전원을 농어민 후계자로 자동적으로 선발한다. 농어민 후계자 정착자금 지원도 강화되어야 겠으며 농업계 전문대학 졸업자중 영농종사자에게 병역의무를 면제한다. 또 기본적인 농지구묘를 갖출 수 있도록 농지구입, 시설화, 기계화 등 규모화를 지원하여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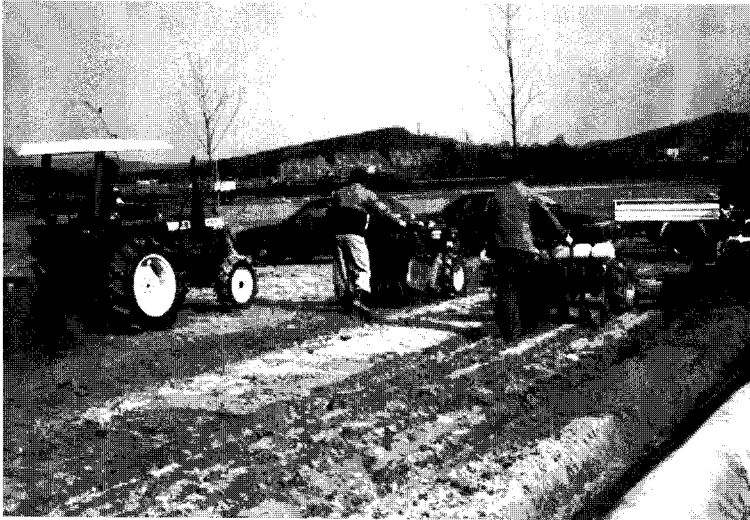
3. 농업계 대학

농과대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과대학의 학생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농과대학은 지난 1970년의 19개에서, 1981년 22개, 1985년에는 26

개, 1991년 28개로 변화하였다.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문리과 대학의 낙농학과를 포함하면 29개이며, 1993년 개교 예정인 성화대학교 농학부를 포함하면 30개가 된다. 국립대학은 1970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 12개를 유지하고 있으나 사립대학이 1970년의 7개에서 1991년 16개로 증가하였다.

농과대 학생수도 1970년의 1만여명에서 1981년 2만 7천여명으로 약간 증가하여 왔다. 그후 1980년대 대학입학 정원증원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여 1992년 5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업계 고교생수는 1970년 4만여명에서 1981년 5만 5천여명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여 1992년 3만 8천여명으로 나타나 농과계 대학생수가 농업계 고교생수에 비하여 오히려 더 많게 나타났다.

둘째 학생의 문제도 있다. 현재 대학입학난에 의하여 농과대학에 대한 지원지수는 모집정원에 비하여 많은 편이다(11개 농과대학 조사 결과 1992년의 입학생의 경쟁률이 평균 4.12 : 1이다). 그러나 자신의 희망이나 적성과 관계없이 우선대학에 들어가고 보자는 마음에 의하여 농대에 지원합이 62.4%이고, 자신이 위해서 지원합은 극히 낮았다(월간 대학수험정보의 3개 대학 농대생 1,016명에 대한 조사 결과). 농대생의 90%가 도시출신이고 영농목적 입학자는 10%미만이고(11개대 조사결과), 농업계 고교 졸업자의 비율은 15%미만이며, 부모의 직업이 농업인



경우가 적었다. 그에따라 농과대 학생중 자진하여 학업을 그만두는 학생이 타대학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농과대학 학생수 크게 증가
영농목적 입학자는 10%미만**

셋째 농과대학의 대학과 학과의 명칭이 변경되고 있다. 농대의 명칭 변경을 살펴보면 중앙대학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등 주요 대학들이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타대학도 따라서 명칭을 변경하려는 계획을 갖고있다. 조사대상 17개 농대 가운데 5개가 명칭변경 계획이 있거나 고려중이었다.

명칭을 변경한 이유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대의 학문영역이 점차 넓어져 기존의 명칭이 부적합하다는 것이며, 둘째, 「農」자가 붙은 기존의 이름으로는 신입생을 모집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농과대학의 인기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과대학의 명칭변경에 대하여 반대하는 농과대학 동창회나 농업전문가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무엇을 공부하는 대학인지 알 수 없게 만들었으며 우리 사회의 농업경시 풍조에 교육기관까지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 명칭 뿐만 아니라 농업계 대학의 학과 명칭 변경도 나타나는데 농업경제학과를 산업경제학과로, 잠사학과를 천연섬유학과로, 농학과를 식량자원학과로, 임학과를 산림자원학과로, 원예학과를 원예과학과로, 축산학과를 동물자원학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참고로 일본의 농과대 교육을 살펴보면 동경대 농학부도 3백명 모집에 2백여명만이 응시하고 있어 우리와는 차이가 나고있다. 그에따라 동경대는 농학부를 생학부 혹은 생명과학부로 변경하려 하고 있으나 농업경시 풍조가 아닌가 하는 비난도 만만치 않다.

농과계 대학교육 개편방향은 전국의 농과대학을 자연스럽게 통합하고 학생수를 감소시키며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학과로 변경한다. 통합되어지는 대학내에 농업과학센터를 설립하

여 지역 농민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다행히 1993년부터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경기도 지역의 농어민후계자를 대상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며 많은 농과대학들이 지역의 농업에 대하여 더 많이 연구하고 농민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겠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의 각종 시험장과의 산학협동체제 구축 및 기존의 사업을 강화한다. 대학의 연구시설과 교육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재정적 지원을 한다.

결론적으로 농업계 학교교육의 체도를 개편하고 농정당국과 연계하여 충분한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 다행하게도 1993년부터 농림수산부에서는 농수산계 10개 고교에 30억원, 4개 농과대학에 20억원의 실험실습기자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농업계 학교 졸업생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겠는데 지난 1981년부터 시작한 농어민후계자 5만 8천여명 가운데 농수산계 학교 출신은 25%인 4천 7백여명이고 농대출신은 1.4%인 8백여명 뿐이다. 농업계 교육이수자를 더 많이 지원하여야 하겠다.

그러나 농업계 각급학교의 체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희망에 찬 농업의 미래상의 제시를 전제로 함으로써 학생, 교사, 교수, 교육행정가들의 정예 농업인력 양성의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농약정보**